

DR자원 용량 4271MW로 소폭 감소

지난 6월 보다 81MW ↓, 참여고객 증가... 용량 줄어든 대신 시장은 '안정화'

4차년도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자원규모가 지난 6월보다 81MW 감소한 4271MW를 기록했다. 전체 자원 용량은 줄었지만 대신 참여고객 수는 3580개로 10% 가량 증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등록을 마친 신규 DR 자원은 4271MW로 지난 6월 중간자원 등록기간 당시 4352MW보다 소폭 낮아졌다. 2014년 이후 자원 용량은 매 자원 등록 기간마다 증가했고,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DR업계에도 용량 확대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력 분야 전문가들 역시 DR시장의 적정규모를 5000MW 내외로 보고 있는 만큼 자원 증가세도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규모는 줄었지만 수요관리사업자, 참여고객이 증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수요관리사업자는 기존 17개사에서 3개사가 신규 진입해 20개사로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는 우암코퍼레이션, 충남도시가스, 사론 등이다. 11개 기업만 참여했던 DR시장 초창기에 비해 신규사업자 진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여고객은 지난 6월 3195개보다 385개가 증가한 3580개로 집계됐다. DR사업자들이 자원 규모가 작은 고객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용량

DR시장 출범 이후 추이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014.11	2015.06	2015.11	2016.06	2016.11	2017.06	2017.11
등록용량(MW)	1520	2444	2889	3272	3585	4352	4271
수요관리사업자수	11	15	14	15	14	17	20
참여고객수	861	1323	1519	1970	2223	3195	3580

은 줄었지만 반대로 고객 수는 증가했다. 또 DR시장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관심을 보이는 고객도 늘었다.

다만 DR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개선할 사항도 하나 둘 도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 7~8월 갑작스런 등록시행이 집중되면서 DR사업자들의 갑작 이행률은 급락했다. 갑작 이행률이 100%에 근접할수록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7월에는 70%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정부, 전문가, DR사업자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며 DR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갑작을 잘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못하는 사업자에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DR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또 DR시장 운영 방식이 워낙 복잡한 걸 감안해 DR

사업자, 참여고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광호 전력거래소 수요관리팀장은 "DR시장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반영되는 만큼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DR시장이 국내 전력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업계 등이 이해관계자들과 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R시장은 전기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사용량을 줄여 피크를 절감하고, 그만큼 발전소 건설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전기 소비를 줄여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대표적인 친환경 자원으로 꼽힌다. 올 여름 무더위로 인한 냉방부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DR시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위대용 기자 wee@

우리지역 (전기차 보급 담당, 나아나!

(2) 전은옥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장

“전기차는 광주광역시의 미래”



울장현 광주광역시시장의 관용차는 쏘울EV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45km로 다소 짧지만 광주 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윤 시장이 전기차를 직접 타는 이유는 광주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관 산업을 광주의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게 윤 시장의 생각이다.

광주광역시 전기차 보급업무 담당하는 전은옥 자동차산업과장은 “2014년 3명에 불과했던 전기차 업무 인력은 울장현 시장 부임 이후 17명으로 늘었다”며 “광주는 가야자동차, 한국전력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625대를 보급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56기, 완속 530기를 설치했다. 광주시청 주차장에선 수십대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연결돼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올해 여름 자동차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전 과장은 광주에서 전기차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올 초 계획한 100대를 상반기에 보급완료했고, 하반기에 277대를 추가로 보급했는데 이마저도 동이 났다. 내년에는 660대, 2025년까지 전기차 2만9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 광역시 중 지자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광주시의 통큰 결정 덕분이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평균 500~600만원 수준인데 광주는 700만원을 지급한다. 국비 1400만원과 더해 21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광주시는 전기차를 단순히 보급하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차량 수만 늘린다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친환경차 연관산업을 육성해서 관내 부품기업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시 차원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부품기업들을 친환경차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지원도 하고 있죠.”

광주=위대용 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은 505억원을 들여 친환경 자동차 선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과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3030억원을 투입하는 국책 사업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5년간 진행되는 사업 중 1차년도인 올해는 19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입한다. 차체 분야에서는 이중복합 소재 적용 차체 경량화 모듈, 특수목적 자동차에서는 확장형 다목적 새시 플랫폼과 가변형 구동력 확장 구조용 하이브리드 새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다.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 산업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차의 장점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올해에만 수소차 41대를 보급했고, 수소를 만들기 위한 개질 기술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차카셰어링 기업 ‘제이카’는 국내 최초로 수소차를 렌트카로 활용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에 이용하는 차량은 수소차 15대, 전기차 27대다. 제이카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기업이다.

전 과장은 “제이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호응도 좋다”며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위대용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 절반으로 낮춘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이번 달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한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을 허가한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점용료 부담이 컸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는 문제없지만 관리

를 위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한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을 허가한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점용료 부담이 컸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는 문제없지만 관리

할 때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고, 충전소 운영 시에도 점용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소액 점용료는 간판을 도로에 놓거나 공사도 인체 도로를 점용할 때 내는 비용이다. 1만원 미만이면 제한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고,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위대용 기자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도입 논의 본격화되나

완성차 업계에 일정 수준 이상 친환경차 팔도록 규제
전기차 보급 예산 부담 줄이려면 불가피한 선택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수록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전기차 리더스포럼’에선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도입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우석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시험계

발설장은 “2025년 친환경차 시장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340만대 수준”이라며 “미국은 같은 기간 전체 판매의 22%를 ZEV(은일가스 무배출차량)로 판매해야 하며 위반시 1크레딧 당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도 한국도 친환경차의무판매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30~2040년 내연기관 모델 판매금지를 선언했듯이 명확

한 전기차비전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한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00만원 가량으로 미국에 비해 1.6배, 독일·프랑스에 비해 1.4배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수록 정부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박종원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은 “충전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을 포함해 구매-운영과정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YES 가솔린 엔진 고가차 부품

“VISION 2020”
전력산업의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GLOBAL LEADER - (주)운영

PROTECTION AND MEASURING

(주)운영은 대한반도체 분야에서 디지털전력보호계전기, 누전차단부의 인형, 화재의 발생에 의한 과난을 이면제 방지용 등 있는 국가 중요시설인 누전보호계전기(ELDI), 지역감출계전기(WGFR), 영상의류계전기(DS), 전류의 선방, 전류, 전력 상대를 표시 성능 및 중 있는 계측기(WETER), 그리고 계측용변류기회 변압기(CT/VT)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지보호기 SPD

● 누전검출기
● 자력 감출계전기
● 영상변류기
● 계측기
● 전기용량계기
● 제기용변류기

주식회사 운영
WOONYOUNG CO., LTD.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영광읍 천안대로 2122-20
Tel. 041)411-3300 Fax. 041)411-3838
www.woonyoung.com